

# 신시대를 위한 한일의 공동진화

하영선 · 손열 엮음

하영선 · 손열 · 이숙종 · 이원덕 · 전재성 · 정재정 지음

2015. 8

1945

1965

2015



##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로 발전하여 평화로운 국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사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5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신시대를 위한 한일의 공동진화”

ISBN 979-11-86226-53-7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 신시대를 위한 한일의 공동진화

하영선 · 손열 엮음

하영선 · 손열 · 이숙종 · 이원덕 · 전재성 · 정재정 지음

2015.8



## 차 례

I. 서 론	1
II. 미래의 동아시아 형세와 한일관계	3
III. 한일관계의 현안과 해법	10
IV. 과거사 갈등의 극복	18
V. 결 론	26





## I. 서론

한국과 일본은 수교 이래 최악의 상태에서 한일국교 정상화 50 주년과 각각 광복과 종전을 기념하는 70 주년을 맞이했다. 빠르게 굴러가고 있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긴 세월이 흘렀어도 양국 관계는 더 나빠졌다. 문명사적 변환을 겪고 있는 21세기 동아시아는 더 이상 개별국가 중심의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과거 패러다임으로는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그렇다. 한일 양국은 이러한 변환의 도전 속에서 새롭게 만나야 할 운명에 봉착해 있다. 2015년을 맞이해서 수많은 회의와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연구원(EAI)이 새로운 보고서를 준비한 까닭은 단순한 한일관계 복원 대책을 넘어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21세기 변환의 동아시아 전체 판도를 정확히 읽고 그 속에서 한일관계의 목표와 가치, 역할을 재조정하여 신 한일관계의 출발에 기여하고 싶기 때문이다.

21세기 문명사적 변환이란 기왕의 국제관계에서 개별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힘의 각축과 세력균형의 원칙이 행위자, 무대, 연기(演技) 세 측면에서 혁명적 변환을 겪고 있음을 말한다. 국가안팎의 비정부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부강(富強)의 무대를 넘어서 기후변화 및 환경, 문화, 기술 등의 무대가 새롭게 부상하며, 국가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지구적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경쟁, 협력, 공생의 복합연기를 해야 하는 시대가 찾아왔다. 동아시아에서도 중국의 빠른 부상으로 인한 세력전이 일어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세력균형 외교가 전개되는 한편 통상, 금융, 개발, 기후변화, 환경오염,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이슈영역에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 다국적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보다 수평적이고 유연한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버넌스적 질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힘의 각축과 세력균형,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서로 어우러지는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질서 건축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치열한 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재균형(rebalance)’이란 가치를 내걸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질서에 깊이 개입하고 있으며, 중국은 ‘친성혜용(親誠惠容),’ ‘운명공동체,’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현란한 언어와 개념을 동원하여 지역질서 건축의 주도권을 잡고자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이른바 ‘국제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가치 하에 보통국가화의 길을 추구하는 동시에 미일동맹의 일체화로 지역적, 지구적 과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러한 질서건축의 경쟁이 개별국가들의 각생(各生)이 아닌 지역 전체의 공생을 가져오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일관계의 목표와 가치 그리고 역할도 이러한 시각에서 새롭게 모색되고 찾아져야 한다. 공생의 가치를 담은 동아시아 복합질서 건축을 위해 한일관계의 위상을 재설정하고 내용을 새롭게 채워가야 한다. 이제는 한일관계의 미래를 진지하게 함께 성찰하고 협의하며, 그 속에서 과거사를 정리해가면서 다가오는 미래사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는 비전을 마련할 때이다.

1965년 한일 양국은 냉전 질서 속에서 자국의 부강을 위해 서로 필요해서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국교정상화의 결단을 내렸다. 한국은 일본과 경제협력을 통해 근대화를 성취할 수 있었고 일본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발돋움하며 경제협력의 이득을 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양국은 냉전체제 속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반공의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안보협력을 착실히 쌓아왔다. 이러한 이익의 공유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역사인식의 수렴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경주해서 1992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파트너십 선언, 2010년 간 담화 등의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여 동아시아는 역동적 변환의 과정을 겪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동아시아의 전략적 환경이 변화하고,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돌입, 민족주의의 부

흥, 신흥이슈들의 대두 등, 커다란 변화를 맞아 한일 양국은 더 이상 과거의 국익 쟁점에 따라 양자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의 전략적 목표 설정과 추진 방법은 상당히 구시대적 색채를 띠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라는 일국중심적 변영논리와 무력증강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강화라는 안보논리로 ‘보통국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우익 민족주의에 근거한 정체성의 정치를 전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단순한 반일 민족주의에 근거하여 역사문제 등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온 결과 정책적 유연성이 약화되고 전략적 선택공간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이런 속에서 한일관계는 본격적으로 협력의 신시대를 열기엔 커녕 상황적 필요에 의한 갈등의 봉합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일 양국이 발상의 전환 없이 동아시아의 미래를 맞이한다면 단순한 양국관계의 긴장과 갈등을 넘어서 보다 구조적 위험을 겪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미래사의 성찰로부터 우리는 세 가지 국제정치적 위협의 가능성을 식별해 낼 수 있다. 첫째는 국가 간 안보갈등이다. 동아시아의 21세기 형세가 미국과 일본이라는 기성대국에 중국이라는 신흥대국이 도전하는 양상으로 짜이는 가운데 미중 양국은 과거 강대국 간의 불행한 역사적 선례와는 달리 평화, 신뢰, 협력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상호불신의 틀 속에서 한미일 협력네트워크와 중국과의 관계는 서로 군비경쟁으로 치닫는 안보딜레마의 위험을 안고 있다. 둘째는 이익 갈등이다. 탈냉전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잠재적 갈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 간 경제협력은 ‘원-원’ 경쟁이 아닌 ‘제로섬’ 경쟁의 측면을 띠

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공생을 위한 협력이 보다 절실한 기후변화 및 환경, 첨단기술 및 지식과 같은 신흥무대에서의 협력도 빠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강대국정치를 지배해 온 관습대로 국제문제를 지나치게 안보적 시각에서 보게 된다면 이익에 기반한 협력의 틀을 만들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는 감정 갈등이다. 근대 이행기와 냉전기의 잘못된 만남에서 만들어진 기억과 정체성의 충돌로 인해 한일관계와 중일관계가 감정적 갈등 관계로부터 계속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경우 상호 협력과 신뢰가 진전되지 못하는 아시아 예외주의(Asian exceptionalism)가 사라지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 한중일 삼자관계는 물론 아시아 전체의 지역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안보갈등, 심지어 무력충돌의 가능성도 열어놓게 된다.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에서 한미일과 중국 관계가 상호 대결 구도를 형성하여 안보, 이익, 감정 갈등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공생 구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익 차원의 협력을 최대한 늘리며, 국가 정체성에 지역 정체성을 통합시켜 감정적 대결을 완화하는 복합 신질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양국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단순히 양국 간 개별 정책들의 조정만으로 이루질 수는 없다. 대내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를 넘어 공생을 향한 ‘지구적 민족주의’의 토대를 쌓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복합외교 패러다임을 갖추어 가면서 양국이 ‘공동진화’ 혹은 ‘공진(coevolution)’해야 한다. 신 한일관계는 동아시아 복합신질서 구축을 위한 한일의 공진으로 비로소 가능하다.

미래사의 성찰을 통해 동아시아 복합신질서 구축을 위한 한일 공진을 모색하는 일은 21세기 동아시아 형세의 면밀한 진단에서 출발한다. 먼저 제 II 장에서는 미래의 형세를 전망한다.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축을 둘러싸고 미국의 ‘재균형전략’과 중국의 ‘신형국제관계론’이 경합하는 속에서 미중관계의 동학, 동아시아 고유의 체계적 요인, 국내정치적 요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후, 미래 동아시아가 봉착할 수 있는 3대 위험요소와 그에 상응하는 과제들을 제





시할 것이다. 제 III 장은 역사적 시각에서 한일관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양국관계의 악화 배경과 원인을 분석한 후, 단기처방을 제공하는 한편,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공공외교 방안을 검토한다. 제 IV 장은 한일관계 과거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법으로서 역사인식의 수렴, 역사갈등의 완화, 역사화해의 실현, 집합정체성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미래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투-트랙’을 넘는 ‘쓰리-트랙’ 접근법을 제시한다. 첫째, 안보, 번영, 신흥무대에서 양국의 공동이익 확대를 위한 협력, 둘째, 근대적 갈등요인 극복을 위한 처방으로서 상호자극 회피, 내재적 요인 치유, 역사화해를 위한 제언, 셋째, 장기적으로 국가와 지역의 복합정체성 형성을 위한 노력 등 3 면의 노력을 통해 한일관계 및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 미래의 동아시아 형세와 한일관계

### 1. 미중의 동아시아질서 건축 경쟁

냉전 종식 이후 미국 중심의 견고한 단극 체제가 10여 년간 유지되었다. 그러나 테러와 반테러 전쟁, 미국의 일방주의적 군사주의에 대한 세계적 반발, 그리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단극체제는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 단극체제에서 패권을 행사하는 미국에 대한 필연적인 균형의 메커니즘도 있었고, 21세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미국 혼자 감당하기에 벅찬 것도 단극 체제 약화의 이유였다. 미국은 경제 위기 이후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지구 차원에서 핵심 이익에 집중하는 조정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동아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미국의 패권 부활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지역이 되면서 여기에 정책자원 투자를 증대하는 아시아 재균형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

동아시아가 미국의 외교전략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한 데에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변수도 함께 작용한다. 중국의 빠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경제력뿐 아니라 외교력, 군사력을 함께 증가시켰다. 중국은 경제위기를 계기로 자국의 지역적, 지구적 영향력을 증가시키려는 다양한 전략과제를 제시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도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19세기 중반 근대로 편입된 이래 겪어온 민족적 고난을 극복하고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9년에 중화민족주의를 구현하는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중국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 동아시아 지역질서 건축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

미중 관계는 21세기 들어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전후 중국은 미국 중심 질서에 도전하는 공격적 정책을 추진하다가 2009년 이후 미국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2013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신형대국관계’라는 비전을 공유하면서 강대국 간 세력전이가 패권전쟁으로 치닫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공감대를 구축했다. 서로 군사적으로 대결하거나 충돌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면서, 윈-윈 협력을 추진하자는 기본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힘이 증가하면서 핵심이익의 범위가 넓어지고 미국은 이를 견제하려는 노력을 벌이는 현재 과연 신형대국관계가 구체적인 이슈들에서 장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검토가 필요하다.

미중 간 세력균형의 변화가 향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귀결될지를 쉽사리 전망하기는 어렵다. 양국 모두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거대한 강국이며 일반화하기 어려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전략을 통해 기존의 동맹국들과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중국 주변의 동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비전과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이 미치는 현상 변경의 영향력을 최대한 평화롭게 흡수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반면 중국은 평화로운 부상 전략을 기반으로 중화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대국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견제를 제어하는 반접근, 지역거부전략(Anti-Access/Area Denial: A2/AD)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의 경제적 수단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양자, 소다자, 다자 경제 협력체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미국 중심의 양자 동맹체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나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CICA)’와 같은 중국 중심의 새로운 다자협력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친성혜용의 정신에 입각한 ‘신형 주변외교’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부상이 평화로운 부상이라고 설득하기 위해 매력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육지와 해상의 실크로드를 하나로 연결하는 ‘일대일로’ 전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서부 국가들과의 다층적 경제협력을 목표로 한 일대일로 전략은 중앙아시아, 인도 등 서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향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의 목표 지역에 86 개 국가가 걸쳐 있다고 보고, 중국의 적극적 투자와 인프라 협력을 유인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국가와의 경제적 유대를 기초로 전략적 협력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중동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 제한되어 있던 지역전략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구 거버넌스에 비(非)아시아 지역의 협력국도 확보할 수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의 거점이 되는 남중국해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는 한편, AIIB 를 설립하여 일대일로 전략의 제도적 환경도 정비하고 있다. 중국은 2015 년 들어 증시불안 등 향후 경제발전 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내수 강화를 목표로 한 ‘뉴노멀(new normal)’의 경제 전략도 안착시킬 필요성에 직면한 가운데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향후 지속적 경제 발전에 필요한 외부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은 협력과 갈등의 양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역사에서 부상국은 기존 패권국의 질서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면서 대안적 국제질서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중심의 시장질서에서 성장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다. 또한 미중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공통의 이해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고,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도 떠안고 있다. 일례로 미중 간에 2009 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미중전략경제대화’는 양국이 얼마나 많은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2015 년 6 월에 개최된 전략경제대화의 경우 총 127 개의 세션이 개최되었고 안보, 경제, 환경, 에너지, 사이버안보, 민간 교류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환경과 에너지 문제는 전체 세션의 약 1/3 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였는데, 이는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과 지구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성격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중 양국은 서로 간의 이익을 증진시키면서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원칙을 마련하고자 다층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의 핵심적 이익이 부딪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중국해 문제와 사이버 안보가 대표적인 이슈들이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핵심 부서에 대해 해킹을 지속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이 세계정보질서를 해치는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는 본격적인 안보이슈로 미중의 동아시아 전략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이슈이다. 중국은 소위 구단선 내의 남중국해가 자신의 해양영토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며, 최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등 분쟁대상 국가들과 첨예한 이익충돌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석유시추시설 건설, 암초 매립, 무기배치 등 보다 적극적인 영유권 주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평화로운 문제해결, 공해상 항행의 자유와 같은 원칙 준수, 그리고 동맹국 지원 등의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



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의 상당부분을 실제로 소유하는데 성공할 경우 향후 전략적 함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 베트남 등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필리핀이 최근 국제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할 행동이나 일본의 남중국해 개입 의지 표명을 반기고 있다. 동시에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대중 포위정책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해 당사국뿐 아니라 원칙 중심의 다자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중 양국은 동아시아를 둘러싼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원칙에 근거한 정당하고 실용적인 경쟁, 그리고 원하지 않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직접 충돌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과연 미중이 공통의 원칙에 지속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경쟁이 주변국에게 큰 전략적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가 관건이다. 일례로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은 공해상 항행의 자유를 최대한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군사적 활동 감시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원칙 해석에서 대립하고 있다. 원칙 기반 행동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중국도 정면으로 수용하면서 본격적 경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중 간의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양국이 무력과 군사력에 기초한 문제 해결방식을 지양하고 원칙과 규범에 기초한 경쟁방식에 합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양국 공히 시대적 경제적 과제에 직면하여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전망을 하게 하는 요인이다.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 자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비를 줄이면서 중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중국 역시 뉴노멀의 시대에 경제 체질 개선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안정적 대외환경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상당 기간 지속될 구조적 요인으로서 미중 관계 악화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동아시아의 질서는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와 신형주변외교를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관계 속에 미중이 서로 협력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형성될 것이다. 미국은 시장과 민주주의, 인권에 기초하여 기존의 동맹국들과 양자관계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를 최대한 확보하고, 동아시아의 다양한 다자주의에서 여전히 구조적 권력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의 군사적 현상변경을 억제하고 중국이 기존 질서에 편입되도록 규칙에 기반한 변화를 도모할 것이며,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더라도 미국이 주창해온 규범을 받아들여 기성 질서에 도전적이지 않도록 유도하고자 할 것이다.

반면 중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최대한 밀어내어 제 1, 2 도련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한편, 남중국해 구단선 내의 영해를 획득하고, 일대일로 전략을 성공시켜 서부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 나아가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과 경쟁하면서 대안적 질서를 제시하는 지구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뉴노멀의 경제를 안정시켜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산당의 안정적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국내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미중 양국의 질서 건축이 평화롭게 공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세력전이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고, 자칫 전쟁을 불러올 경우 이는 미중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양국이 원하지 않는 우발적 충돌, 혹은 민감한 이슈가 확대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시 충분한 대화와 신뢰구축이 필요하며, 위기 시 대응방안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양국은 안보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은 자국의 부상을 좌절시키기 위해 미국이 오히려 현상변경 세력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부당하게 보고 있는 반면, 미국은 중국이 점차 핵심이익의 범위를 넓히면서 공세적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좌절시키려 한다고 보고 있다. 양국 모두

스스로 공세적이거나 현상변경을 시도하지는 않더라도 미래의 미중관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불확실성 자체에 대한 균형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압도적 국력을 가진 미중 간의 안보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세력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과연 미중의 지역질서 건축 경쟁이 어떻게 귀결될 지가 주목된다.

## 2. 한국과 일본의 전략 공간

미중의 동아시아 지역질서 건축 경쟁은 동아시아 주변국에게 심각한 도전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미중은 상호 전략적 불신 때문에 주변국에게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는 위압적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주변국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은 양보와 이익을 제공하는 회유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매력공세를 강화하면서 평화로운 부상을 설득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 역시 동맹국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대중 전략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냉전 종식 이후 보통국가화를 향한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은 미중 간 세력경쟁의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국의 압력이 있더라도 이를 견뎌낼 수 있는 국력, 특히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고, 미국의 재균형전략에 찬동하면서 안보라는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을 일정 부분 희생하면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자체 국방력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베 정권은 중국과의 동중국해 영토분쟁, 역사분쟁 등을 기회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국방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적 제약을 떨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 집단자위권 발동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변경하는데 성공하고 있고, 다양한 안보법제를 개정하여 일본의 목표인 군사적 보통국가화, 더 나아가 군사강국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전략을 적극 지지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미국보다 훨씬 강경한 대중전략을 추진한다. 중국의 위협이 상존하고 증가할수록 보통국가화를 향한 일본의 노력이 국내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욱 강경한 대중전략을 추구하는 것이다. 향후 일본은 자국이 추진하는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전략을 미국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미중 간의 전략적 불신과 지역질서 건축 경쟁은 한국에게 매우 심각한 전략적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 상대적 국력이 약하고, 지리적으로 중국에 가까울 뿐 아니라 미중 경쟁에서 매우 민감한 위치에 있다. 더구나 분단국가로 분단의 상황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은 한국에게 큰 부담이 된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과 지속적인 대남 도발에 직면하고 있고,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미중의 협력이 한국의 국가 목표 실현에 필수불가결하며, 특히 북한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 주도의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이러한 한국의 입장은 우선 일본의 대중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미국의 대중 전략과도 일정한 편차를 보일 수 있다. 특히 미중 간 세력경쟁의 국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다른 이익구조는 동아시아 질서 건축을 둘러싼 양국의 비전과 시각의 편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 3. 구조적 환경요인

21세기 지역질서 건축을 둘러싼 주요국간 경쟁에는 동아시아 고유의 불완전한 근대화의 유산과 오늘날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동아시아가 근대로의 이행과정에서 겪어온 내재적 변수로서 체제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는 19세기 중반에



들면서 역사적으로 예(禮)를 명분으로 하여 천하를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으로 나누는 화이(華夷)개념에 근거한 전통 위계질서로부터 근대 국제질서로의 변환을 급속하고 압축적으로 겪어온 결과 지역에 고유한 문제들을 안게 되었다. 서구에서 아시아로 부과된 주권적 국민국가체제는 근대적 제국주의의 발현으로 드러난 결과 유럽식 베스트팔렌 질서로 속히 변환되지 못하였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야 서구 제국주의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고 역내 국가들이 서로의 영토와 국민의 경계에 합의하고 주권의 상호 평등을 존중하는 근대적 규범을 수용할 기회를 맞았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회의는 일본이 강제적으로 병합했던 영토를 새롭게 확정하는 동시에 일본을 보통국가화하고 주권의 상호 존중을 약속할 수 있는 계기였다. 하지만, 미소 냉전이라는 새로운 논리가 동아시아의 탈제국, 탈식민 과정에 개입하면서 일본의 완전한 탈제국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한국과 중국의 분단이 고착되고 독도, 남중국해, 일본 북방 도서 등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와 관련된 영토문제가 미해결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로써 명확한 영토를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근대 주권국가 질서가 불완전하게 출발하게 된다. 결국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가져왔던 민족의 경계와 근대 국가의 국민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겪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서로 대립하는 주체들이 서로 주권을 가진 단위로 승인받기 위해 경합하는 비정상적 양상을 보이게 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세력균형과 동맹, 다자주의적 제도를 형성하는 등 근대적 국제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주권 단위의 완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베스트팔렌 체제의 안정성을 누리지 못한 채 경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국제정치질서를 유지해 왔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일본은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며, 한국은 약화된 북한에 영향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속에서 치열한 주권게임은 탈냉전 국제정치적 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통일을 위해 대만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과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일본은 보통국가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견제를 막아내고 미일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중일 간의 경쟁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며 협력구도는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위해 미중 모두의, 특히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이는 일본의 전략 방향과는 상충하게 된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제국을 유지해 온 중국이 강대국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시 제국적 열망을 중국의 꿈에 포함시킬까 두려워한다. 또 다른 한편, 한국과 중국은 보통국가화된 일본이 19세기 제국주의의 활력을 부활시킬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요컨대, 한중일 3국이 의심과 대립, 갈등을 보이는 것은 완전한 근대국가로 서로를 승인한 역사가 아직 없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구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구조적 불안요인은 보다 보편적이고 지구적인 추세에서 기인한다. 이른바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가 초래하는 국내정치의 덧이다. 현재 세계경제는 2008년 위기 이후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은 현저히 약화된 반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정체국면에 있다. 20세기 중후반 자본주의 황금기에 축적된 거대한 자산으로부터 더 이상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거대한 불균형(great imbalance)’은 고령화와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현상과 함께 장기적인 정체를 가져오고 있다. 2015년 현재 중국경제 성장률은 7.4%로 둔화되었으며, 그리스 사태를 겪고 있는 유럽의 장기침체는 타 경제권에 비교해도 가장 나쁜 수준이며, 미국경제의 나홀로 회복세 역시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경제가 버블붕괴와 함께 장기 디플레이션 국면에 들어선 이래 일본은 경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2012년 말 제2차 아베 내각은 이른바 아베노믹스란 야심찬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일본경제 부흥에 매진하고 있다. 그 결과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시키고 엔화 가치 하락으

로 수출 경쟁력을 증대시킨다는 전략은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GDP의 230%에 이르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한 과연 장기 저성장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 지에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보다 구조적 문제는 일본 사회의 초고령화이다. 일본은 1970년에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06년에는 동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현재 일본인 4명당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이다. 긴 평균 수명과 낮은 출산율, 여성의 높은 미혼율(2010년 기준 35-39세 여성의 20.2%가 미혼)로 저출산 고령화의 골이 깊어가면서 생산가능 인구(15-64세) 비중도 점차 줄어,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자면 노인 1인을 부양하는 생산가능 인구가 미국에 4명, 영국이나 프랑스에 3명 정도 있다면 일본에는 불과 2명만 있을 뿐이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경제활동과 소비시장의 위축을 의미하고, 이때문에 고용환경과 생활기반이 나빠져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어 다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 구조를 고착시키게 된다. 이러한 인구 구조는 복지 지출을 늘려 국가 부채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저성장과 초고령화 문제에 더하여 일본 사회의 불안과 위험 인식을 높이고 있는 것은 양극화 문제이다.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전 국민의 90%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이른바 '1억 총중류사회'라는 사회통합적 상징은 무너져 내렸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상승세이던 지니계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더욱 악화되었고, 소득 격차에 더해 자산 격차는 더 나빠져 삶의 기회의 격차를 상징하는 말로 '격차사회'라는 표현이 등장, 일상화되기에 이르렀다. 2000년대 말 일본의 지니계수는 0.33으로 OECD 국가 34개국 가운데 24위로 소득불평등이 높은 쪽에 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빈곤층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빈곤율도 2010년 기준 1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고용을 포기한 사람이나 피고용인의

거의 1/3에 해당하는 높은 비정규직 비중 등으로 고용의 질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고도성장기는 차치하더라도 1990년대 8%에 달하였던 연평균 경제성장율은 2010년대 들면서 2-3%대로 추락하였다. 성장잠재력이 급속하게 저하되고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일본, 아일랜드에 비해 성장률이 낮은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를 결정적인 계기로 해서 노동시장에 빠른 수준의 양극화가 진전되었다.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기준 32.4%이고 저임금이 급격히 증가하여 OECD 기준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미국에 이어 제 2위(25.2%)이다. 빈곤율은 6위(16.5%), 청년층 고용율(15-29세)은 OECD 평균(50%)에 훨씬 못미치는 39.7%이다.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사회적 위기가 증대되고 있는데, 수명은 늘어나나 퇴직연령은 오히려 낮아져서 노후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노인 빈곤율 OECD 1위, 노인자살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사회는 일본사회가 겪어온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의 길을 보다 압축적으로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일본과 한국의 현실은 사회정치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는 사회적 취약성을 증폭시켜 사회적 극단주의 경향 확산, 민족주의 부흥, 정책의 내향성 강화 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기성 정치체제와 세력에 대한 불만이 점증하면서 대담한 정책과 강력한 지도력을 내세우는 지도자들이 등장하기 용이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한중일 삼국과 러시아에서 민족주의적 열정을 강조하고 강력한 리더십과 국가주의적 통치스타일을 부각하는 지도자가 등장한 점은 이러한 지구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에서 우익 민족주의 부흥, 한국에서 반일 민족주의의 강화 역시 이러한 구조적 흐름과 관계되는 것이다. 한일관계 복원과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서 정책의 내향성이 강화되고 민족주의와



배외주의 경향이 증가하는 현실은 한일 양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무거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4. 3 대 위협요소와 대응과제

한국과 일본은 이처럼 밖으로는 동아시아 고유의 지역체제 불안정성, 안으로는 사회적 취약성 증대로 말미암아 민족주의적, 내향적 압력을 받기 쉬운 환경 속에 놓여 있어 한일관계를 넘어서는 다음과 같은 국제정치적 위협 요소와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안보갈등의 국제정치라고 할 수 있다. 군사안보적으로 동아시아의 미래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온 기성질서에 중국이 도전하는 양상일 것이다. 지난 4월 28일 미일 정상은 ‘미일공동비전성명’을 내면서 21세기 양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은 밀접하며 국경에 의해 정의될 수 없다는 상징적 선언으로 미일 일체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 미국은 경제적 쇠퇴에 따른 영향력 약화를 기존 동맹국과 전략적 유대 강화로 메워나가려 하는 속에서 일본을 핵심 파트너로 삼아 중국의 부상이 초래하는 현상변경의 압력을 최대한 흡수하려 한다. 문제는 미일 양국 간 대중인식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데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불신에도 불구하고 평화, 신뢰, 협력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면서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원칙을 마련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중국과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상호불신의 틀 속에서 전략적 경쟁을 벌여왔다. 아베정부는 중국위협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집단적 자위권 발동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변경하고 군사력 강화를 통한 보통국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미국보다 강경한 대중인식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속에서 한미일 협력네트워크가 짜인다면 중국 네트워크와의 관계는 보다 적대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서로 상대방을 방어적이기보다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시각에서 해석함으로써 안보를 위한 방어적 군비증강도 결과적으로 공격적 군비경쟁

으로 치닫는 안보딜레마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이 방치될 경우 동아시아 전반, 특히 일본보다 국력이 약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으며 분단 상황으로 인해 주변 강대국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한국은 매우 심각한 전략적 고민에 빠질 것이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네트워크와 중국 네트워크 간 안보딜레마를 방지하고 상호 공존, 진화하도록 이끄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 이는 한일 양국, 나아가 한미일 삼국이 중국을 품는 복합네트워크를 건축해 가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이익갈등의 국제정치다. 지구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적 위상이 증대되고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역내 경제협력을 추동하는 제도화 노력이 경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AIIB와 ADB, RCEP과 TPP의 경합에서 보듯이 경제무대에서 ‘미일 vs. 중국’이란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의 동아시아는 ADB와 TPP를 바탕으로 한 기성질서의 우위, 반대로 AIIB와 RCEP를 바탕으로 한 이른바 신흥질서에 의한 기성질서의 전복, 그리고 제3의 길로 양자가 공존하며 조화롭게 진화하는 세 가지 선택지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경제적 이익 계산에 따른 ‘윈-윈’ 경쟁이 아니라 안보적 영향으로 ADB와 AIIB 사이, TPP와 RCEP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제로섬’ 경쟁의 가능성이 다가온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생을 위한 협력이 보다 절실한 기후변화와 환경, 첨단기술과 지식 같은 신흥무대에서도 강대국 정치에 지배되어 안보화의 부정적 효과가 증대되면 협력의 가능성은 저하하게 된다.

따라서 핵심과제는 무역, 투자, 금융, 기술 등 이익의 영역, 그리고 기후변화와 환경, 에너지, 사이버안보, 재난구조, 전염병 등 신흥영역에서 강대국간 전략적 경쟁의 안보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공통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미중 간 경합하는 네트워크 혹은 제도가 서로 공존하고 양립할 수 있으며 나아가

통합될 수 있도록 공진의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감정갈등의 국제정치다. 근대 이행기와 냉전기의 잘못된 만남에서 만들어진 기억과 정체성의 충돌로 인해 동북아는 감정적 갈등관계로부터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한일, 한중 간 인식의 차이가 국가 간 감정적 대립으로 비화되고 나아가 안보적, 경제적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감정이 상대방에 대한 정체성 구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략적 갈등상황으로까지 치닫는 경우도 빈번하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보통국가화 혹은 군사력 강화노력을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감정적 갈등으로 인해 구성된 일본의 군사적 정체성에 기인한다. 마찬가지로 일본과 한국이 중국의 대국화와 중국의 꿈을 제국적 열망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과거의 기억으로 구성된 정체성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제도화와 보편적 가치외교를 통해 이성적 관계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지만 중국의 빠른 부상과 일본의 부활로 인해 아시아 예외주의(Asian exceptionalism)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협력이 지지부진하고 안보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기왕의 감정적 갈등을 한일관계의 차원이 아닌 지역의 안정과 공생이란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신 한일관계는 한일협력의 가치를 동아시아의 공생과 번영에 두고 안보, 이익, 감정 갈등의 해소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의 공진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 III. 한일관계의 현안과 해법

#### 1. 한일관계 악화의 배경

한일관계의 최대 갈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독도, 역사인식을 둘러싼 마찰은 빈도와 심도의 양 측면에서

1990년대 이후 한층 격화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 더욱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 냉전 종식 이후 한일 관계의 갈등 요소는 오히려 증폭되었다. 냉전 시기 한일 간의 결속을 강화시켰던 요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하에서의 반공 연대였다. 미국은 냉전 체제 하에서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대 공산권 봉쇄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 간의 독도 및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은 잠복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붕괴로 그 동안 잠재되어 있던 민족주의적 갈등 요소는 여과 없이 표면으로 분출하게 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큰 지각 변동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급부상과 일본의 상대적 힘의 쇠퇴 그리고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등장이 그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미중 양강 구도의 등장은 한일관계의 성격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12년 이후 격심한 한일, 중일 간의 대립과 마찰이 벌어진 것은 동아시아의 세력전이 현상과 더불어 한국과 중국의 정권교체가 동시 진행하면서 나타난 세력균형의 유동화에서 그 구조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둘째, 한일 양국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한일 간에는 정치인, 경제인의 인적 채널 및 네트워크에서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이후 양국의 잦은 정권 변동과 정치인의 세대교체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형성 유지되어 왔던 정치인 간의 비공식 인맥관계는 단절되었다. 1965년 국교수립 후 한일 정치인 간에는 수많은 공식, 비공식적 채널이 잦은 회합이나 긴밀한 의견교환을 통해 민감한 정치현안이나 갈등 사안은 막후에서 조정, 타협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점차 약화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정치인 간의 교류나 접촉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갈등 발생 시 문제해결 능력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한일관계는 더 이상 특수한 관계가 아닌 보통의 양자관계로 변





화되었고 양국 간 현안은 정치인들보다는 외무 관료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반면 시민사회, 지방자치체, 기업 차원의 교류는 폭발적으로 증대했다. 이처럼 한일관계가 보통의 관계로 변화되면서 갈등을 수습하고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셋째, 한일 간의 양자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는 점 또한 양국관계를 이완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960년대 이래 한국은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마침내 선진경제로 도약했으며 한편으로 80년대 후반 이래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성과도 착실하게 달성하였다. 1990년대 한국의 OECD 가입은 한국이 선진국의 일원으로 진입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한국이 비교적 단시일 내에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함에 따라 국민들은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보다 당당한 외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화되었다. 권위주의 정권이 한국을 지배하던 시대만 하더라도 한일 간의 역사문제가 뜨거운 외교 쟁점으로 등장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반면, 국력신장과 민주화가 동시 진행되면서 대일 자세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민주화 이후 한국정부는 폭발적으로 표출되는 국민들의 대일 감정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대일감정을 활용한 강성 대일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민주화와 정치권의 세대교체에 따라 영향력이 강화된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강렬한 민족주의적 정서를 표출하며 대일 정책에 있어서 강경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넷째, 일본 국내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 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정치적 지형은 보수우경화가 날로 강화되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에서는 이제 평화헌법 개정론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자위대의 보통 군대화 움직임 또한 당연한 변화로 인식되고 있다. 수상 및 각료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비판 움직임도 상당히 무더졌다. 국민의 역사인식도 2000년대 이후 점차 보수적인 방향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 주소다. 이러한 경향은 한마디로 평화국가로부터 군사적 보통국가로의 탈바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국민은 큰 저항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의 보수우경화 경향은 정계의 세대교체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전후세대 정치인들은 미일동맹 중심의 강성 외교안보 정책의 추진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중국 등에 대한 근린 외교의 비중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도문제나 역사마찰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는 이들에게 심각한 외교현안이 되지 못한다. 전후세대 일본인들은 역사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일반적으로 과거 식민통치와 아시아 침략역사에 대한 속죄의식을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영토문제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과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러한 경향은 2009년 민주당 집권기 잠시 주춤했으나 2012년 아베 정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정점에 달한 느낌이다.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와 2013년 7월 참의원에서 자민당의 압승은 일본정계를 사실상 보수세력 일색으로 변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간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견제 역할을 담당했던 이른바 진보-리버럴 세력은 고령화, 약체화되었고 야당은 지리멸렬하였다. 게다가 정계의 이러한 우경화 추세에 대해 일정한 비판과 자정기능을 수행해 왔던 시민사회 세력도 약화되었다.

## 2. 관계악화의 직접적 원인

최근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양국 지도층 간의 소통 부재와 양국의 미디어 보도를 경유하여 나타난 국민 레벨의 극단적인 상호인식의 확산에서 찾을 수 있다. 말하자면 한일관계의 극단적인 악화는 존재론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인식론의 횡행 속에서 양국의 외교정책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인 관점이 무시되

거나 전략적인 사고의 영역이 점차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민은 한 마디로 아베 총리가 통치하는 일본이 위험한 우경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불을 당긴 것은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와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자신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고노담화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일본 정부의 반성-사죄론적인 자세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여 2015년 새로운 역사담화를 내놓겠다고 발언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일본의 전후 정치에서 조심스럽게 다뤄져 왔던 헌법개정, 안보정책의 전환을 선거공약으로 내어 놓고 이른바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 일본을 되찾자는 슬로건을 속속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의 미디어는 일제히 아베 정권 등장 자체를 매우 위험한 조짐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부추기는 기사들을 내어놓았다.

이러한 한국의 대일인식의 배경에는 식민통치의 암울했던 기억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편견과 선입견이 앞서게 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한국의 일본인식에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유전인자를 우익적인 것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파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역사관련 행보,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안보정책의 전환 시도 그리고 영토정책을 우경화라는 프리즘을 통해 하나의 위험한 패키지로 보는 경향이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일본의 한국인식에도 지나친 단순화와 객관성의 결여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일본의 한국인식이 최근 급속하게 부정적으로 기울게 된 데에는 2012년 여름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방문과 천황사죄 발언 그리고 일본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저평가 발언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소멸에 대한 위헌 판결(2011년 8월), 대법원의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한 한국인 강제징용자에 대

한 일본 기업의 손해 배상 책임과 미지급임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판결(2012년 5월) 이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이 가중되고 징용 징병 피해자의 잇따른 보상 요구 움직임이 한국 국내에서 표면화되면서 일본사회 일각에서는 일종의 한국에 대한 사죄피로 현상 내지 험한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이면에는 최근 한국이 경제, 산업, 문화, 스포츠 등 몇몇 분야에서 일본의 강력한 경쟁 또는 경합 상대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과거 수직적이었던 양국관계가 수평적인 것으로 바뀐 것에 대한 인식의 부적응 상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사회에는 바야흐로 중견국 한국의 대두를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정서가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의 부정적 한국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다. 특히 이러한 인식이 강화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정책 담당자들의 외교행보 및 대일발언에서 비롯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전제되지 않은 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미국, 중국, 유럽의 주요 국가와 정상 외교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역사인식을 비판하였다. 일본의 미디어와 우익계 잡지는 한국의 이러한 대중경사 경향을 마치 한국이 과거 사대주의 외교로 회귀하고 있는 것인 양 묘사하는 논조로 보도하는 경향조차 보이고 있다.

일본의 대중 인식은 한 마디로 중국 위협론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센카쿠-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일본인들은 중국을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고도 경제성장과 정치군사 대국화를 달성했지만 그 내면에는 사회경제적 격차, 정치적 독재와 부정부패, 민족문제, 버블경제 등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한국은 그러한 중국을 잘 모르고 순진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역사 문제 등에서 일종의 반일연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인



식이 점증하여 왔고, 이러한 인식이 일본의 험한 정서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 2년 반 동안 극단적인 경향으로 치닫고 있는 양국 간의 상호인식은 상당한 부분 상대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국의 뒤튼린 상호인식이 수그러들지 않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악순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

### 3. 관계악화의 비용 증가

한일관계 악화로 양국은 상당한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외교무대에서 서로의 약점을 잡아 끌어내리는 이전투구로 자원을 낭비하고 양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감정은 뒤튼려 ‘반일’과 ‘혐한’의 목소리도 커졌다. 양국관계 악화 속에서 경제 분야의 주름살도 커졌다. 한일 간 무역, 투자, 관광, 교육, 문화 및 인적 교류는 눈에 띄게 위축되었고 재일 한국인들의 민생도 어려워졌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무역, 금융, 투자, 관광 등 경제 분야에서 구축해 온 일본과의 협력관계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악영향이 적지 않게 파급되고 있다. 특히 양국 기업 간 초국적 생산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 일본 자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그리고 한국의 대일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경제계의 경고음과 함께, 일본에서 생업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재일 교포나 80년대 이후 새롭게 일본에 건너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뉴커머들 사이에서도 일본 국내의 험한 정서와 반한 감정이 확산되면서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교관계에서도 관계 악화의 비용은 대단히 크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방미를 통해 미일 ‘신 밀월관계’를 구축했고 미국 조야에서의 한일 갈등 확산에 따른 피로감도 누적되어 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역사인식과 영유권 문제로 극단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일본도 이미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관계 복원의 불씨는 살려놓는 실용적

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 대해 역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 원리주의적 접근을 고수하면서 실리에 기반한 대일 외교를 전개하지 못한다면 외교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다. 2015년 10월 박 대통령의 방미 외교의 성패는 복잡한 난제에 직면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구현할 한국의 전략과 비전을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전략을 기반으로 중국의 신형국제관계,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 신질서를 건축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핵심요소로 확신하도록 하는 데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동아시아질서 건축경쟁의 한계와 불안정성을 한국의 구상이 어떻게 보완해서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건축을 완성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문제와 통일을 염두에 둔 일본과의 관계 재정립이야말로 대일 외교의 핵심적 고려 요소이다. 중국의 급부상, 미국의 패권적 지위의 상대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지닌 위상과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 지경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 문제는 일본에게 핵심적인 관심사였고 명치 이후 한반도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통일과정에서 일본 변수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에도 일본은 북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관해서 보면 한국과 더불어 최대 이해 당사국임에는 틀림없다.

끝으로 장차 일본의 대북 청구권 자금은 북한지역의 경제재건 및 인프라 재구축 과정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50억불-100억불로 추산) 고려할 필요가 있고, 1965년 이후 한국의 산업화, 경제성장의 성공에 일본의 자본, 기술의 도입을 포함하는 경제협력이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을 생각한다면 일본의 대북 청구권 자금(경제협력)은 북한지역의 피폐한 인프라의 재구축 및 경제재건 과정에서 가장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이고 장차 통일비용의 절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장차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ODA)은 한국과

의 긴밀한 대화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는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과 법치가 보장되는 형태의 통일이고 그 과정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 한일 양국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4. 정상화를 위한 정상회담 개최

현재의 비정상적인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5년 6월 이후 개선의 실마리가 잡혀가고 있는 한일관계를 정상회담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6월 22일 서울과 동경의 대사관에서 개최된 한일수교 50주년 행사에 교차 참석하여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협력과 공영의 미래를 여는 전환점을 만들자”고 제안하였고 아베 총리는 “앞으로 50년을 위해 손잡고 새 시대를 열자”고 화답했다. 이로써 지난 2년 반 동안 심각하게 경색되어 있던 양국 관계는 변곡점을 넘어 새로운 단계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에는 오랜 동안의 단절을 깨고 국방, 재무, 통상, 관광 분야의 장관 회담이 재개되었고 윤병세 장관의 방일과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어 관계 개선을 위한 정지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8월 14일 한국은 물론 중국과 미국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보여왔던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아베 총리는 비록 직접적 사과는 안 했지만 역대 내각의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날 광복절 축사에서 전향적으로 평가하면서 한일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오늘의 국제정치에서 정상 외교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상(頂上)회담 없는 정상화(正常化)’는 부득이한 경우 차선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정상화

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야말로 대일 외교의 정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수교 50주년의 상징성과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2015년 하반기는 정상회담의 골든타임이다. 당장 공식방문에 의한 정상회담 개최가 어렵다면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다자 정상회담의 장을 빌어서라도 양국 정상이 대면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①아베 정부의 기존의 역사인식 및 역사 정책의 계승 입장을 명백한 확인 ②양국 관계의 긴급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보상 문제에 대한 해결 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 ③한일 간 미래 협력의 방향 설정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는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의 협상에 박차를 가하여 2015년 중에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1998>을 한층 업그레이드 한 형태로 <21세기 한일 신시대 선언 2015>을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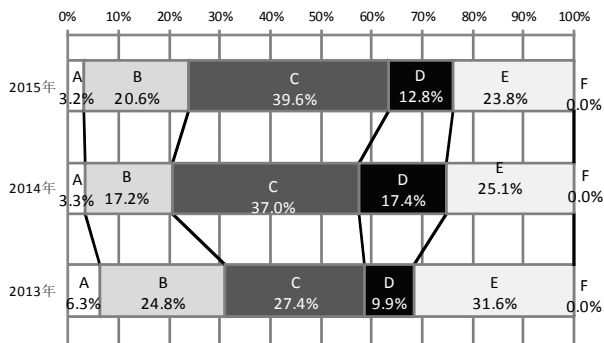
#### 5. 전향적 대일공공외교 추진

2002년 월드컵 공동주최와 이후 한류 붐에 힘입어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크게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2012년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본 천황 관련 발언으로 일본인의 혐한감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일본 내각부가 2012년 10월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 대해 ‘친하게 느낀다’고 답한 일본인은 39.2%로 2011년 조사의 62.2%에서 무려 23%나 줄어들었다. 반면, ‘친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1년 사이 23.7%가 늘어나 59%의 일본인이 한국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관계가 좋지 않다는 의견도 2011년 조사시점보다 42.8%나 늘어난 78.8%로 치솟아 일본 내각부 조사 이래 최고로 한일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 2012년 말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최근 수년간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여론은 2012년을 기점으로 이후 더 공고해져 가고 있다. 아베 총리의 우파적 역사 해석과 언행이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을 자극하면서 외교 경색과



일본 비판을 가져왔고 이것이 다시 일본인들이 한국을 싫어하는 혐한론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켄론 NPO 가 실시한 2013-2015 년 세 차례의 각 년도 조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한국에 대해 인상이 ‘좋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일본인이 3 년 조사에서 37.3%, 54.4%, 52.4%로 늘어난 반면에 ‘좋다’는 긍정적 견해는 줄어들었다 다시 조금 늘어나 2015 년 조사에서는 23.8%의 일본인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림 1>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상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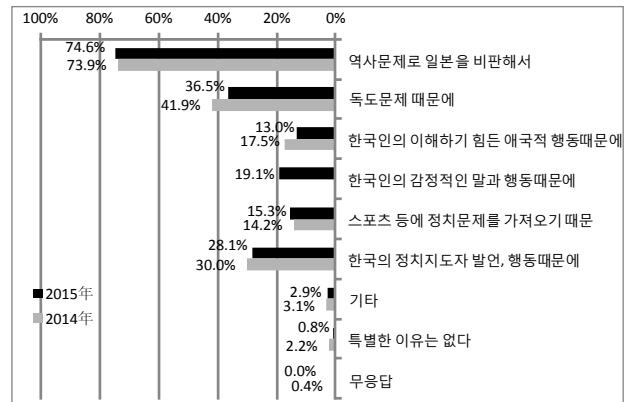


주: A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B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C 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D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E 어느 쪽도 아니다/모름

이들 조사에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는 일본인들의 반한감정은 한국의 반일감정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인들은 한일관계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한국민의 반일감정, 한국 정치인의 반일감정, 한국 미디어의 반일보도 등의 감정적 요인을 중요하게 꼽고 있다. 한일관계에서 감정적, 정서적 요인은 한국인의 일본 인식에서는 중요했지만 일본인의 한국 인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인 사이에 한국인이 일본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싫어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니 일본도 한국이 싫다는 반동주의적 혐한론과 일본이 아무리 사과해도 한국인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죄 효과에 대한 회의론 인식들과 맞닿아

있다. 8 월 초에 발표된 종전 70 주년을 기념하는 아베담화를 준비한 전문가회의 보고서는 이러한 회의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한국의 대일인식이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침략’이란 용어를 본 보고서는 일절 포함시키지 않았고, 식민지 역사에 대한 사과도 불충분하기 짝이 없었다.

<그림 2> 일본인들이 보는 한일관계 발전의 저해요인



한국의 사회정치체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은 한국을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로 보는 경향이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로 보는 경향보다 강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일본인의 70% 가까이가 한일 양국민의 감정이 나쁜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걱정하고 있다(29%)’거나 ‘문제이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38.8%)’로 답했다는 것이다. 일본인의 60% 이상이 현재의 한일관계가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60%를 넘는다. 이러한 여론을 고려하여 일본에서 혐한론을 속히 차단하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이해 증진을 위한 공공외교의 과제를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1) 일본의 사죄와 반성에 대한 공공외교

한국의 반일과 일본의 반한 여론이 악순환되는 근본적 이유는 과거사문제의 청산에 대해 양국민의 인식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 조야는 물론 일반 국

민들의 다수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문제가 타결되었고 일본이 천황이나 총리가 공식적으로 충분히 사죄와 반성을 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2015년 일본의 여러 매체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베 담화에 과거사문제와 관련해 역대 정권이 유지해 온 핵심 표현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보다 10%-20%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 것으로 보아 사죄피로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더 많은 수의 일본인들이 사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1</sup>. 한편, 한국은 이러한 사죄와 반성 노력이 아직 미흡하고 특히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법적으로도 종군위안부나 강제징용자 피해자 개인이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국내 법원들에서 최근 나오고 있어 청구권협정에 따른 법적 청산이 완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의 여론주도층은 한국이 전시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한국이 미국과 같은 제3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제기하는 것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전시 성노예와 같은 보편적 인권문제의 틀에서 이를 접근해 국제사회의 가치와 규범의 문제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어 양국의 동맹국으로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한일 양국의 공공외교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이 과거 식민지시대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표현이 불충분하더라도 한국도 일본의 사죄 피로증

을 고려하여 과거사문제로 일본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거나 훈계하는 방식은 공공외교로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정리와 한국에 대한 사과는 일본인 스스로가 자기성찰을 통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려면 피해와 가해의 관계를 초월하는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공통의 이상을 프레임으로 걸고 그 안에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가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취해 온 한국이 옳고 일본이 틀렸다는 도덕론보다는 가해자의 상처도 함께 치유한다는 공감과 소통으로 과거사 대일 공공외교의 방법론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워싱턴을 향해 한일 양국이 공공외교전을 펼치기보다는 당사국인 한일 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양자관계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보수주류를 끌어안는 공공외교

한국의 대일 공공외교는 소극적인 문화외교에 그치고 있다. 악화일로에 있는 일본인의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전략적인 공공외교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외교의 대상을 일본사회 내 소수인 진보세력이 아닌 다수의 보수층을 겨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시민사회 내 진보나 리버럴 계열의 인사들이나 단체들은 과거사문제에 있어 비교적 일관적으로 한국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들은 한국측이 원하는 의견을 대변하고 있어 정부나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과 연계하고 협력한다. 그러나 일본사회 내 이들의 영향력은 약하기 때문에 보수화된 다수의 일본인들의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에는 마땅한 통로가 아니다. 한국의 대일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은 우익을 제외한 다수의 보수적 일본인들을 겨냥해야 한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수장을 비롯한 원로 보수 정치인들이나 이른바 보수로 분류되는 일본의 매체들도 아베 정권의 과거사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들이 중시하는 일본의 평

<sup>1</sup> 산케이(産經)신문의 2월 조사에서는 50년 발표한 무라야마(村山)담화에 들어가 있던 '침략,'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 '사죄'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이 51.6%로, '쓸 필요가 없다'는 36.6%보다 15% 많았다. 일주일가량 앞선 아사히(朝日)신문 조사에서도 52%가 이러한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답해 그럴 필요가 없다는 31%보다 21% 많았다. 그러나 2월 초 요미우리(讀賣)신문 여론조사에선 10%만이, NHK의 조사에선 13%만이 더 담화에 유사한 표현들을 담기를 희망했다. 아베 담화에 과거사 반성이 담겨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하지 못한 데에는 이른바 '사죄 피로증'이 자리 잡고 있다. 아사히신문의 4월 조사에서는 일본인의 57%가 '전쟁 등으로 피해를 끼친 국가와 국민에게 사죄와 보상을 충분히 했다'고 답해 '아직 불충분하다'는 의견에 동의한 24%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2006년 4월 조사에서의 응답 비율인 '충분히 했다' 36%와 '아직 충분하지 않다' 51%가 크게 역전된 결과이다. 앞으로도 사죄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한다는 견해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46%와 42%로 갈렸다. 사죄는 충분히 했지만 그래도 계속 사죄해야 한다는 일본인들이 조금 더 많은 셈이다.



화주의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함을 알리고 이들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사죄피로증을 달래줘야 한다.

우선 일본 주류 보수층을 끌어안으려면 양국의 동질성을 강조해야 한다. 한일 양국은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이자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된 근린이웃이며, 대중문화 및 생활양식이 유사한 동질적 사회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본 소재 한국문화원이나 아리랑 TV 등 정부나 준정부 기관들이 소통과 정보제공, 지식의 나눔과 교류의 장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차원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 대사관과 공사관을 중심으로 일본사회와 적극적인 교류와 네트워킹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일본 여론주도층이 한국에 대해 품고 있는 일본경시론과 중국경시론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공공외교 콘텐츠를 생산, 유포할 필요가 절실하다. 정부만이 아니라 미디어, 경제단체, 다양한 시민단체, 교육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비정부단체나 기관들도 각자의 틈새역할을 활용하여 한일 양국 사회 간에 친밀감과 유대감을 증대시켜야 한다. 잘못된 과거사 인식문제는 소통과 교류의 쌍방향 방식으로 바로 잡되 동시에 일본을 존중하고 칭찬함으로써 한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나아가야 한다.

### 3) 우익주도 혐한론을 차단하는 공세적 공공외교

공공외교의 방법론은 통상 소통과 공감 등 소프트 관여 전략이 유효하지만 일본의 우익세력이 주도하는 혐한 스피치, 거리 데모, 한국 상인들의 영업방해 등의 조직화된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공세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에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인종차별적 혐오연설(hate speech)을 규제하고 일본 내 한국인들과 재일교포의 안전을 보호하고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 간 외교에 힘쓰는 것은 물론 일본 지식인과 미디어, 시민단체들이 우익세력의 조직화된 반한운동을 저지하는 데 스스로 나서도록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세적 공공외교의 효과성을 위해서 국제적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미디어의 보도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

한일 양국민은 상대국에 대한 뉴스와 정보를 일차적으로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해 얻는다. 대중적 미디어들은 센세이셔널리즘 추구로 뉴스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인터넷은 포퓰리즘적 한일 네티즌의 상호 비방의 통로로 사용된다. 익명성과 개방적 접근성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가상공간에서는 규제보다는 좋은 본보기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미디어 공공외교를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뢰성이 높은 블로거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한국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 바른 정보와 소식이 가상공간에서 유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일본인들이 일차적으로 소식을 얻는 TV 방송의 경우 뉴스의 객관성 확보는 물론 다큐멘터리, 드라마 및 탐색 기획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문의 경우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한국 보도의 톤이 다르지만 균형감 있는 사실과 보도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기존의 언론인 포럼들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대사관이 일본 주요 매체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기자회견 등의 PR 활동을 강화해 전략적 공공외교를 할 수 있는 외교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5) 미래세대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의 공공외교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일본의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반한감정이 적고 한국을 이해하려는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다. 이들 세대는 10-20년 후면 장래 일본사회를 이끌 주역이 되므로 이들 20대와 30대 청년층에 공공외교를 맞춤형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K-pop 등 한국 가수들이나 한류의 꽃

인 TV 드라마 방영과 같은 대중문화 전파는 일본 청년세대의 한국 호감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문화공공외교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시장기제가 작동하는 부분이 큰 영역인 만큼 공공외교 차원의 지원은 공익적 성격의 프로그램 쪽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국과의 직접적 교류가 한국관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므로 대학생들과 근로 청년층 세대가 여행, 워킹홀리데이, 유학, 연수 등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직접 경험은 한 사회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이해도를 심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하며 이러한 경험이 있는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친구이자 교량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상호주의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 공중파에 일본어 방송을 허용하는 대중문화의 완전한 개방화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 IV. 과거사 갈등의 극복

### 1. 역사인식의 수렴

역사문제는 한일 양국 간 정체성 갈등을 야기시키는 원인이고 나아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뿌리 깊은 사안이다. 때려야 뗄 수 없는 숙명적 관계인 양국은 역사인식의 수렴을 통해 역사갈등을 극복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서로 자기의 역사인식이 옳다는 고정된 관념, 상대국의 역사인식만을 문제 삼아 개선을 요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세련된 자세를 갖추는 일일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상대방에 대한 역사인식은 서로 공명하는 특수 관계에 놓여 있다. 일본의 한국인식이 개선되면 한국의 일본인식도 개선되고, 한국의 일본인식이 개선되면 일본의 한국인식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 온 것이다. 그러므로 두 나라 국민은 이 점을 명심하여 서로 먼저 상대방에 대한 역사인식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

로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역사인식을 개선하는 지름길이다.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서 유력 정치가가 한국의 역사를 폄하하고 왜곡하는 망언을 늘어놓아 한국 국민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고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자주 발생해 왔다.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이런 반목과 갈등 속에서도 일본의 역대 정부와 국민의 한국에 대한 역사인식은 기본적으로 개선의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 대세는 두 나라 정부와 국민의 역사인식이 점점을 향해 수렴하는 경향이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역대 일본 정부와 총리가 발표한 역사인식에 관한 담화 등을 보면 부분적으로나마 일본 쪽의 역사인식이 한국 쪽의 역사인식에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한일 수교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하지 않았다. 1980년대 초에도 나카소네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침략전쟁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양국 사이에 불행한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했을 뿐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자민당의 장기 집권 체제가 무너지자, 호소카와 총리는 창씨개명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해 비로소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 그 후 사회당이 집권하자 무라야마 총리는 1995년 각의결정으로 ‘식민지 지배를 통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해 통절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그렇지만 이른바 ‘무라야마담화’는 연립정권의 파트너인 자민당의 견제도 있어서 아시아를 겨냥하여 포괄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쳤고,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칭한 것은 아니었다. 식민지 지배에서 일본을 가해의 주체로, 한국을 피해의 객체로 명시하면서 ‘사죄와 반성’의 역사인식을 분명히 천명한 것은 1998년의 오부치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었다.

이처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와 총리의 역사인식이 한일 수교 이후 30년 정도 지난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의 역사인식 쪽으로 가까워진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세는 2000년대 이후





에도 기본적으로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재임 중 해마다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여 한국과 역사갈등을 빚었지만, 방한 중 서대문형무소 유적지를 방문하고, ‘사죄와 반성’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한 역사인식은 2002년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발표한 조일평양선언과 2005년에 발표한 고이즈미담화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2010년은 ‘한국병합’ 100년을 맞는 뜻 깊은 해였다. 민주당의 간 나오토 총리는 이를 계기로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인의 의사에 반한 식민지 지배’라는 표현을 구사하였다. 이것은 간접적으로나마 ‘한국병합’이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이었다. ‘한국병합’과 그로 인한 식민지 지배에 대해 당초부터 한국 정부는 불법·부당을, 일본 정부는 합법·정당을 주장해왔다. 1990년대에 이르러 일본 정부는 합법·부당 쪽으로 선회하는 듯한 경향을 보였는데, 2010년에 와서 여기에 강제성을 추가하는 듯한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급격히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여 단명에 끝나는 바람에 간담화는 일본 국민 사이에서 곧 잊혀져 버렸지만, 일본 총리의 역사인식이 한국 쪽과 공명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에는 틀림없다.

현재 아베 신조 총리는 한일 간의 역사갈등을 야기하는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역시 기본적으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역사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는 국회 등에서의 답변을 통해 자신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부정할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아베 내각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안으로 다시 부각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고노담화를 반복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트리기 위한 변명일 수도 있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인식을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보편적인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역사교과서 기술에서도 개선의 궤적을 찾아볼 수 있다. 한

일 수교 당시와 지금의 일본 역사교과서 기술을 비교하면, 한일관계사에 대한 기술이 양적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근대 일본이 1875년 강화도사건 이래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과정, 식민지 지배에서 자행된 차별과 억압, 동화와 동원, 탄압과 수탈 등에 관련된 사안은 실례를 들어 기술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는 간략하게나마 언급하고 있다. 1997년 이후 몇 년 동안은 7종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모두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한두 줄 기술한 바 있다.

요컨대, 요즈음 아베 정권이 반동적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수교 이래 끈질긴 대화와 교섭을 통해 역사인식에서 상당한 접근을 이룩해 온 것이 대세였다. 양국의 정부, 학자, 언론, 시민 등은 이런 엄연한 궤적을 확실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위에서 부족한 점을 찾아내어 개선해가는 지혜와 아량을 발휘해야 한다. 잘못을 비판하고 질타하는 것 못지않게 잘한 부분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오히려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 2. 역사갈등의 완화

한국과 일본이 화해와 상생의 역사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두 나라 정부는 국민의 역사인식에 깊숙이 관여해왔기 때문에 역사갈등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양국 정부가 서로 대립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당장 앞장서서 역사화해의 조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서, 두 나라의 역사갈등을 조금씩 완화하거나 그것이 다른 현안과 결부되어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2010년대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하는 작업을 하는 게 좋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문제를 단칼에 해결하겠다는 조금 증을 억누르고,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언동을 스스로 자제하는 사려 깊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일 양국 정부는 역사갈등의 발생과 대응 경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성찰함으로써 공동의 성취에서 교훈을 얻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써,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역사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도 좋다. 앞으로 양국의 정상이 이에 준하는 역사인식의 틀을 새로 만들고, 그것을 함께 공표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면 효과는 더 클 것이다.

역사인식과 관련된 한일 양국의 새로운 공동선언이 어렵다면, 적어도 두 나라 정부 요인이 역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언동을 자제하도록 규제하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사상과 신념을 억압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요인이 되면 자국과 타국이 약속한 것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하물며 역사인식처럼 미묘한 문제에 대해 양국이 합의한 사안이라면 정부 요인이 그 범위를 벗어난 견해를 피력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정부 요인이 역사인식을 다루는 언동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것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국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부 요인의 일탈된 언동으로 역사갈등을 야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제 장치 아래서도 양국 사이에 역사갈등이 불거지면 이것을 빨리 진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역사갈등이 어느 한쪽의 결단이나 행동으로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 주어서도 곤란하다. 역사갈등은 원래 상대방이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면 확산되지 않는다. 더구나 역사인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이나 국가의 처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역사인식을 운위할 때는 사관의 옳고 그름 못지않게 그것을 다루는 언동 역시 중요하다.

다. 한국은 자신의 역사인식을 일본에 분명히 밝히고 정확히 알리되, 일본의 역사인식을 무시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한국과 일본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왜 그러한 역사인식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역사인식을 풍부하게 만드는 쪽으로 활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언어를 품위 있게 구사하여 상대방을 감동시킨다면 역사갈등은 상당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 3. 과거사 처리의 보완

한국과 일본이 역사화해를 이룩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이것 또한 지난날의 경험에서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역사인식에서뿐만 아니라 과거사 처리에서도 빈번한 대화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관련 당사국과 각각 조약을 맺어 과거사를 처리했다. 그것은 침략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인도적 견지에서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정면에서 반발했다. 그렇지만 일본에 대해 징벌 대신 부활을 조장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국제질서를 무너트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리하여 국교 재개를 전제로 체결된 한일조약에서 과거사 처리의 방법을 규정한 부속협정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라는 어중간한 명칭을 갖게 되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 협정으로써 식민지 지배에 따른 피해 보상, 즉 과거사 처리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끝났다는 식으로 합의했다. 그 후 한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들어온 청구권 자금을 활용하여 1970 년대에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보상을 실시했다.

그런데 1980 년대에 이후 역사인식 문제와 더불어 과거사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한일



조약의 체결 당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사할린 잔류 한인, 재한 피폭자, 일본군 ‘위안부’ 등에 대한 책임과 보상 문제가 잇달아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역사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종래 애매하게 봉합되었던 과거사 처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은 어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일본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를 고수하면서도 인도적 견지에서 기금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태도로써 대응하였다. 그리하여 사할린 잔류 한인과 재한 피폭자 문제에서, 피해자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한일 양국의 협의 아래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일본은 전후 처리에서 일본 국적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지금의 일본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침을 엄격히 지켜왔다. 그런데 1990 년대에 들어서서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국인도 일본인과 같이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는 한일조약을 통해 모두 해결되었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일부나마 덜어주려는 인도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이런 경험과 실적 등을 면밀하게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양국 국민에게 그 실상을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 위에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을 것이다.

지금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좀 더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앞의 두 사안보다 더욱 어렵게 형클어진 원인으로서는 주요 관련 당사자 간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문제 해결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 양국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들을 지원하는 양국의 시민단체 사이에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낼 수 없었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진상 규명, 국회결의를 통한 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술,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상 문제도 한일조약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조성하여 전 일본군 ‘위안부’에게 일정 한도에서 보상을 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 총리의 사과 편지도 전달하였다.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가 심하여 실제로 이 기금을 수령한 사람은 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몇 차례 입법을 통해 이들에게 상당한 수준에서 생활과 의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지금까지의 경위와 조치를 철저히 검증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 강제성의 강약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강제성이 아주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용납하지도 않는다.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이런 태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넣어 해결은 커녕 더욱 꼬이게 만들 뿐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논쟁하면 할수록 일본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한국 국민을 반일 정서에 몰들게 만드는 악재이기 때문에 양국의 지도자가 정치적 결단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최근 한국의 대법원 판결로 다시 주목을 끌게 된 징용 피해자 문제는 한일조약을 통해 해결되었다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한일 간의 외교 현안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입법을 통해 징용 피해자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해왔다. 이러한 조

처를 바탕으로 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책임, 사죄, 보상 등을 실현하는 데는 한일 양국의 처지와 여론 등을 감안하여 유연성과 탄력성을 용인해 주어야 한다. 문구의 표현이나 실행의 방법 등은 서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적절히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 또 양국 국민은 과거사 처리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 애써온 노력을 이해하고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 양국 정부 또한 이러한 경위와 성과 및 과제를 두 나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두 나라 국민 사이에는 양국 정부가 과거사 처리를 둘러싸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무척 많다. 이런 무지와 오해가 역사갈등의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공(功) 있으면 과(過)도 있게 마련이다. 지금부터라도 한일 양국의 정부와 국민은 그동안 써먹은 과거사 처리의 경위와 성과 및 과제를 면밀하게 재검토하면서 그 공과(功過)를 따져 보고 잘한 점은 칭찬하고 못한 점은 반성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와 시민 및 피해자 등이 함께 모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좀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거사 피해자가 모두 고령임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이 작은 이익(小利)에 집착하지 말고 큰 이익(大利)을 추구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종래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면 한국이 영토주권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독도는 현재 한국이 엄연히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한국이 앞장서서 독도를 이슈로 만들 필요는 없다. 한국은 오히려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단호하게 관리하는 쪽이 낫다.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사정과 방침을 이해하고 용인해야 한다. 그 대신에 다른 분야에서 서로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가 두 나

라 사이에서 다른 현안을 압도하는 큰 문제로 부상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나아가 독도 이외의 다른 사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분위기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독도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에서 점차 멀어져 가게 될 것이고, 그와 더불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굳어질 것이다.

#### 4. 역사화해 실현

한일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와 비전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는다면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양국 국민은 먼저 역사문제를 다음 세대에 미루기보다는 지금 세대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새롭게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여론과 환경을 그런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양국의 정치가, 언론인, 연구자 등 여론주도층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양국의 최고 지도자는 인류가 지향해온 보편적 가치의 기준에서 한일관계의 역사를 해석하는 식견을 가져야 하고, 이런 인식에 의거하여 국민이 배타적 민족주의 내지 국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당대의 지도자로서 솔선하여 역사화해를 실현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역사화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업을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

첫째, 양국의 역사연구자와 역사교육자 또는 역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역사인식에 대해 논의하고 대화해야 한다. 원칙을 말한다면,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 문제는 정치·외교의 현안에서 벗어나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에 종사하는 민간인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그를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등을 다시 가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위원회는 역사갈등을 빚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연구와 토론을 깊게 하고, 그 결과를 양국의 역사교



과서 집필자나 역사교육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연구자와 역사교육자는 이미 역사대화와 역사공동교재 개발의 경험을 많이 축적하고 있다.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공동 참가자 사이에 신뢰와 연대를 구축하고 국민 사이에 이해와 공감을 넓혀가야 한다. 계속하는 것은 힘이 된다.

둘째, 한일 양국은 역사갈등이 언제든 내셔널리즘을 자극하고 또 정치·외교에 이용당하기 쉬운 특수사안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간 차원의 역사대화는 이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인식은 국가와 민족, 개인 사이에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한일관계사를 객관화하고 상대화해서 보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완전히 객관적, 상대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한일관계사를 지나치게 자국중심의 시야에서 바라보려는 자세에서는 의식적으로 탈피해야 한다. 우여곡절로 점철된 복잡다단한 한일관계사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국사를 절대화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양자간 혹은 다자간의 관계 속에서 되돌아보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한일 양국의 평화·교류의 역사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2천 년 이상의 한일관계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때때로 침략과 저항 등의 대척적 관계로 뒤틀린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평화·교류의 장구한 역사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우호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가기 위해서는 평화·교류의 역사에 좀 더 많은 시선을 주어야 한다. 그럴 경우, 전근대에서의 평화·교류도 중요하지만, 현대에서의 평화·교류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 특히 1965년 한일국교 재개 이래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는 정부간의 우호협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경제문화 교류, 나아가서는 시민 사이의 연대운동도 활발했다. 일본군 '위안부', 재일 한국인, 역사인식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벌여온 연대운동, 그리고 학교, 단체, 지방자치기구 사이의 자매활동 등은

양국의 여론과 정부를 움직여 역사인식을 개선하거나 이해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부각시킨다면 차세대가 시민 차원의 연대를 통해 공생공영의 방향으로 공진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넷째, 한일관계를 논의할 경우에는 북한까지도 시야에 넣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남한과 일본의 관계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을 무시하고는 한반도의 현대사, 나아가서는 한일관계의 실상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한민족 전체로서의 역사상을 구성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현대의 한일관계에서는 한국과 북한, 북한과 일본의 3자관계가 빚어내는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과 일본은 상대방을 한일관계사의 시야에서만 인식하려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일본은 한국만을, 혹은 한국은 일본만을 상대해온 나라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은 매우 풍부하게 대외활동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역사와 문화는 한일관계사적 시각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고 풍부하다. 좀 과장하면 두 나라 역사에서 상대방과 관련된 부분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양국이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국과 관련된 사안을 통해서만 상대방을 바라보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양국이 상대방에 대해 이렇게 유연한 자세를 견지한다면 역사화해에 이르는 시간은 많이 단축될 것이다.

여섯째, 한일 양국의 지식인과 여론형성자가 역사인식의 개선과 상호이해의 증진을 선도하고 견인해야 한다. 특히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언론은 양국의 역사갈등을 부추기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일본의 주간지, 월간지 등은 한국을 폄하하고 모욕함으로써 판매부수를 늘이려고 할

안이 되어 있다. 심지어는 주류 언론도 이에 추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래서는 역사갈등을 극복할 수 없다. 양국의 언론은 감정에 물든 비방과 중상을 자제하고 사실과 균형에 입각한 보도와 논평을 해야 한다.

한일 사이에 역사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양국관계의 모든 부문을 좌지우지할 만큼 유일무이한 사안은 아니다. 역사문제는 다른 현안과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일 뿐이다. 한일 수교 50주년, 광복 70주년, 그리고 전후(戰後) 7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의 마디를 계기로 하여 한국과 일본이 세계를 향해 공동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가운데 역사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 5.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

한국과 일본은 잦은 마찰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수준에서 본다면 해방과 패전 이래 70년 동안 절차탁마 하면서 꽤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두 나라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옹호 등 글로벌한 가치를 공유하는 동질의 국가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각각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동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담보하는 지렛대로서 기능해왔다. 나아가 국민의 생활양식과 문화수준에서도 선진성과 보편성을 공유하고 있다. 최근 국민 사이에 유행했던 한류(韓流)와 일류(日流)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성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모색한다면 세계의 문명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평화와 공영의 미래를 함께 실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과거사 처리에서 가장 궁극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독일이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기억·책임·미래’재단이 참고가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서도 정부와 기업 등이 함께 출연한 재단을 만들어 식민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장학, 역사문제

에 대한 연구와 보전, 국민에 대한 교육과 전수, 기념과 기억 등의 사업을 한다면 역사화해의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 재단의 이름은 ‘한일미래재단’ 또는 ‘한일우호신뢰재단’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대일청구권자금’을 활용하여 창업하고 대기업으로 성장한 몇 개의 회사가 위와 같은 목적의 기금을 출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국에서 식민지 시기와 그 이후에 큰돈을 번 일본의 기업이 이에 동참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전후보상’ 재판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에는 입법을 통한 조치, ‘강제동원’의 경우에는 기업과의 화해를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국회, 정부,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이러한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마침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 그 속에는 남북한의 평화와 신뢰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의 우호와 신뢰도 들어 있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이 우호와 신뢰를 구축하여 동아시아의 평화협력과 공생공영을 선도한다면 제국과 식민지의 역사화해에서 첫 번째 사례를 만드는 빛나는 업적이 될 것이다.

## 6. 복합정체성의 구축

일의대수(一衣帶水)와 같은 바다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2천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두 나라 모두 자신의 태반(胎盤) 문명 위에서 시대와 세계의 변화에 적응하며 중국문명과 서양문명을 수용하여 개성 있는 문명을 창출하고 영위해왔다. 두 나라는 독자문명을 창출하여 상대방에 전파하는 중심문명은 아니었지만 중국문명과 서양문명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여 상대방에 전수하는 매개자의 역할은 충실히 수행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문명의 전수는 평화롭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침략과 지배와 같은 폭력과 강제가 수반한 경우도 많았다. 선사·고대 시



기에 한국이 일본에게 중국문명을 전파한 것이 전자라면, 근대·현대 시기에 일본이 한국에 서양문명을 전파한 것이 후자였다.

한국과 일본이 문명을 전환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이동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람이 서로 왕래하고 이주함으로써 문화의 수용과 접변(接變)이 광범하게 일어났다. 시대의 부침에 따라 등장한 이주민, 부로인(俘虜人), 통신사(通信使), 유학생, 관료와 군인, 실업가 등은 자발적이건 강제적이건 간에 문화의 수용과 전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막대한 희생과 피해를 입혔지만 이것 역시 문명을 전환하는 데 큰 계기로 작동했다. 백촌강(百村江)전투, 왜구(倭寇), 임진왜란, 청일전쟁(동학농민전쟁), 러일전쟁, 의병전쟁, 항일독립투쟁, 아시아-태평양전쟁, 6.25 전쟁 등은 한일관계와 문명교류에 큰 마디를 만들었다. 한국과 일본의 물자교역도 장기간에 걸쳐 두 나라의 국민생활과 문명교류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간 쌀, 도자기, 철, 금, 은, 동, 인삼, 면포, 비단, 면사(絹絲), 불경(佛經), 서적, 반도체, 전자제품 등은 양국민의 생활과 문화를 지탱하는 재료가 되었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역사 속에서 한일관계를 논할 때 흔히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근대 이전에 한국이 자기 것으로 소화해낸 중국의 선진문명을 일본에 전해줬는데, 근대 이후 일본에서 돌아온 것은 침략과 지배였다는 원망이 섞여있다. 물론 일본인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근대 이후 일본이 자기 것으로 소화해낸 서구의 선진문명을 한국에 전해주었는데, 한국인들은 침략의 측면만을 강조한다고 불평한다. 한일관계의 역사를 이렇게 자기본위로만 바라보면 갈등과 대립의 측면이 부각되고, 두 나라 국민은 서로 좋지 않은 기억과 감정을 갖게 된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역사인식을 둘러싼 충돌이 정치·외교를 제약할 정도의 비중을 가진 만성적 현안으로 되어왔다. 두 나라 지도자가 ‘역사인식의 빛’에 빠져 정상회담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것이 얼마나 강고한 것인가를 웅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역사인식의 빛’에서 벗어나 상호 이해와 공동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는 없을까? 그 출구는 한국과 일본이 수 천 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문명을 형성하고 전환해왔다는 사실, 곧 복합정체성을 체득하고 강화해온 과정을 동아시아사 내지 세계사의 시야 속에서 넓고 깊게 조망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갈등하고 대립하는 가운데서도 서로 가까워지고 닮아왔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문화는 서로 뒤섞여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양국 국민은 일상에서 그것을 함께 수용하고 향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 문명사의 차원에서 본다면 두 나라의 교류와 협력은 더욱 빈번하고 강화되어 공통의 문명을 창출하고 발전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해도 좋겠다. 곧 복합정체성을 더욱 더 공유하는 나라로 발전할 것이다.

저명한 문명사가 재라드 다이아몬드도 위와 같은 견해를 주창한 바 있다. 그의 흥미로운 논문 <일본인의 뿌리>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는 한일 양 국민들에게 상호 불신과 증오의 여지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결론을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아랍인과 유대인처럼 한국인과 일본인은 핏줄이 이어져 있지만, 서로 오랜 전통적인 상호 적대적 감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대립과 갈등은 상호간에 파괴적일 뿐 이로운 건 아무것도 없다. 분명히 한일 양국 국민들은 유년기를 함께 지낸 ‘쌍둥이 형제’와 같다. 이제 동아시아의 정치적 미래는 그들 사이의 오랜 유대를 성공적으로 재발견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sup>2</sup>

<sup>2</sup> 임흥빈, 「한일 쌍둥이론의 의미」, <문화일보>, 1998.8.15.; 재라드 다이아몬드 저, 김진준 역, <총, 균, 쇠>, 문학사상, 2012, pp.677-678.

## V. 결론

2015년 한일관계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일관계는 세계사적 변환이 대단히 빠르게 전개되는 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과거사문제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현재 관계 개선의 노력이 어렵게 추진되고는 있지만 과거의 경험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양국 관계 차원에서 좁은 의미의 국가이익으로 협력을 모색하면서 역사문제를 관리하려는 관성적 노력으로는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양국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 즉, 역사문제는 정부 간 교섭의 형태로 풀어가되, 다른 한편으로 양국의 안보, 경제 협력의 계기를 찾아가는 접근법으로는 바람직한 21세기 한일협력을 이루기 어렵다.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일차적으로 경주되어야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한일 양국은 새 시대에 걸맞은 한일관계를 위해 공진의 노력을 펼쳐야 한다.

본 보고서는 한일 양국이 신시대를 열기 위한 변환과 공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함께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첫째, 21세기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변환의 모습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양국이 현재 겪고 있는 변화는 고대, 중세, 근대로의 이행과 같은 수준의 혁명적 변화는 아닐지라도 이에 버금가는 문명사적 변화로서 새로운 발상과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강대국간 힘의 각축과 세력균형이 주도하는 현실주의적 담론이나, 혹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에 따른 평화이익의 확산과 이익의 윈-윈 게임이 지배적이며 국가뿐만 아니라 비국가행위자들 간에 수평적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거버넌스라는 자유주의의 이분법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별국가들의 정체성의 차별을 주목하는 구성주의적 시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근대적 세력균형과 탈근대적 거버넌스 그리고 차별적 정체성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복합질서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1세기 미래는 현재 질서의 주도국가와 도전국가 그리고 중견국가들이 신질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떠한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가늠할 수 있다. 특히 한일 양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한편으로는 치열한 상호견제와 갈등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무대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복합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며 협력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공동 대응해 가야 한다.

둘째, 양국정부는 미래를 함께 걸어갈 공통의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한일관계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과 협력 수준을 제시하는 전략적 비전을 마련함으로써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한일관계가 양자관계 속에서 생기는 다양한 이익의 공유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미래의 한일관계는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공생을 위한 협력이라는 가치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래의 동아시아 질서가 힘의 각축과 세력균형이 지배하는 근대적 권력정치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적으로 연결하여 수평적으로 근대와 탈근대의 다양한 문제들을 조정, 관리해 나가는 복합 공간으로 변환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한편으로 한미일 협력네트워크를 심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중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면서, 두 네트워크가 갈등하지 않고 상호공존하고 협력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일본과 공조해야 한다. 양국은 미국과 동맹을 축으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되, 대중 관계에서는 중국이 당면한 안보상황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과거의 냉전적 시각보다는 미래의 네트워크적 시각에서 보다 포용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이 남북한관계 개선과 경제활성화 그리고 동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국을 한미일 네트워크에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이러한 네트워크적 노력이 장기적으로 일본의 국익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은 일본이 중국과 근대 150년의 경쟁관계를 갖고 있으며 동중국해 도서분쟁으로 영토 및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강한 부담을 안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일 양국은 중





국을 포용하는 동아시아 복합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한다.

셋째, 한일 양국이 앞에서 제시한 거시적, 장기적 목표를 공유하려면 무엇보다 국내적으로 양국민 간에 엄존하는 상호인식의 차이를 축소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양국 지도층 간의 소통 부재와 양국의 선정적 미디어 보도를 거치면서 상대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극단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양국의 외교정책에서 전략적 관점이 무시되거나 전략적 사고 자체의 영역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내재화된 반일감정 속에서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유전인자를 과도하게 단순화하여 그가 주도하는 역사관련 행보, 평화헌법 개정 추진, 안보정책의 전환, 영토정책 등을 우경화라는 프리즘을 통해 위협하게 보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일본의 한국인식에도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와 객관성의 결여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일본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사죄피로 현상 내지 혐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한국의 중국경사론, 일본경사론이 확산되면서 한국이 중국 편에 서서 일본을 비난한다고 비아냥거린다는 지나친 단순화와 객관성의 결여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한일관계의 핵심문제는 존재론적 차이보다는 인식론적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인식격차의 축소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현재 일본의 지역전략이나 대외정책이 아베 정부만의 특수한 정책산물이 아니고, 아베 정부 이후에도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대중경제, 그리고 한국에 대한 비판적 자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우경화 때문만은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도 한국 내의 뿌리 깊은 반일민족주의 정서에도 불구하고 일본문화(日流) 소비, 일본모텔의 학습, 전후 일본경제의 성공에 대한 존경 등의 다양한 분위기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국민의 인식 차이를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외교가 필요하다. 한일관계의 경우, 자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전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상대국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미디어의 보도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

공외교, 미래세대 교류 확대와 심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상대국의 인식 형성에 정치지도자의 언행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양국 지도자는 보다 폭넓은 역사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서로의 처지와 언행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넷째, 한일 양국은 안보와 번영, 그리고 신흥무대에서 최대한 공통이익을 찾아서 협력하는 신시대를 열어야 한다. 북핵문제와 북한의 미래 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지역적·지구적 안전보장을 위한 협력, 지역을 단위로 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체결, 역내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제도 설계 등 기성 무대에서의 한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빠르게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신흥무대는 양국간 '윈-윈' 게임적 성격이 강하다. 기후변화, 환경, 첨단 기술, 에너지, 지식, 사이버 안보, 재해, 전염병, 이민 등 이슈 영역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기성과 신흥무대에서 한국은 하드파워의 신장뿐만 아니라 지식, 문화, 제도 등 소프트파워와 네트워크파워를 강화하여 주도적으로 한일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지역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다섯째, 한일간 협력의 핵심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호 불신의 가장 큰 원천은 과거사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양국정부가 역사인식의 갈등을 국내정치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정부가 국내적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과거사 문제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면 불신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 양국은 역사인식의 준거를 만들고 양국 정상들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양국 지도자들이 역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언동을 자제하도록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국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부요인이나 정치인들이 돌출된 역사인식을 표명하여 갈등을 야기하는 것을 막고 일관성 있는 역사인식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양국은 역사화해를 위한 장기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인식문제로 양국이 정부수준에서 반목하고 대립하는 현실을 지양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역사문제를 정치외교 현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에 종사하는 민간인에게 환원해야 한다. 민간수준의 역사대화와 역사공동개발 경험을 축적하여 상호 신뢰와 연대를 구축하고 국민적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 이런 공간 속에서 양국은 역사를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자세, 혹은 상대방을 양자관계사의 시야에서만 인식하는 태도를 지양하여야 한다. 상대방을 자국과 관련 사안을 통해서만 이해하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끝으로 한일 양국의 공진은 궁극적으로 정체성의 공유를 지향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정체성이 지난 2 천여 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몇 차례의 변화를 거쳐 왔다면 이제 또 한 차례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 한일 양국민들이 개별 국민국가의 일원인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의 일원으로서 복합정체성을 갖추게 될 때 비로소 양국 간의 해묵은 역사갈등과 영토분쟁이라는 국민국가간 제로섬 게임에 대한 정치적 해답을 찾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을 아우르는 지역적 정체성 구축을 위한 창조적 프로젝트를 장기적 시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저자약력

---

**하영선** EAI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한국 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자문위원,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이다. 저서 및 편저로는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복합세계정치론 :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한일 신시대와 공생복합 네트워크》, 《변환의 세계정치》 등이 있다.

**손열** EAI 일본연구센터 소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미국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국립외교원 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도쿄대학교, 와세다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채플힐(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방문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주 연구 분야는 일본 및 국제정치 경제, 동아시아 지역주의, 공공외교 등이며 최근 저술로는 “미중데탕트와 일본: 1972 년 중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국제정치,” *South Korea in 2013 Meeting New Challenges with the Old Guard* (공저), “아베정권과 미일 관계의 향방, 한일협력” 등이 있다.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외교부, 통일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The Trilateral Commission, 싱크탱크세계평의회(Council of Councils: CoC)의 회원으로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힘쓰고 있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동북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Johns Hopkins University, SAIS) 교수강사, 독일 German Institute for Global and Area Studies 방문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최근 저술로는 “South Korea as New Middle Power Seeking Complex Diplomacy,”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공편),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편), “The Demise of ‘Korea Inc.’: Paradigm Shift in Korea’s Developmental State” 등이 있다.

**이원덕**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동 대학 일본학연구소 소장. 일본 도쿄대학(University of Tokyo)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피츠버그대학(University of Pittsburgh) 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일본 도쿄대학(University of Tokyo) 대학원 국제사회과학 전공 객원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주 연구 분야는 일본 정치외교와 한일관계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한일 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공저), 《한일 신시대와 공생복합 네트워크 3》(공저) 등이 있다.

**전재성** EAI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주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등이며, 최근 저술로는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 역사에서 이론으로》,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등이 있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서울대 대학원에서 한국근현대사 및 한일관계사 전공 한국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 2 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객원교수,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 및 간사, 일본 홋카이도대학(Hokkaido University) 특임교수, 일본 도쿄대학(University of Tokyo) 특임교수, 일본 도호쿠대학(Tohoku University) 동북아시아연구센터 객원교수,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일본 방송교육개발센터 객원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주 연구 분야는 한국근대사, 한일관계사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 세기 한일관계사》, 《帝國日本の植民地支配と韓國鐵道：1892~1945》, 《교토에서 본 한일통사》 등이 있다.

##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 본 보고서는 EAI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유재승 외교안보연구팀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jryu01@eai.or.kr](mailto:jryu01@eai.or.kr)



**EAI**  
EAST ASIA INSTITUTE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4가 310-68번지 삼풍빌딩 909호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www.eai.or.kr](http://www.eai.or.kr)

연구  
2012